

[2026 신년특집] 산지위판장·소비지도매시장 수산물 온라인 거래의 전제 조건

한국수산물경제 | 승인 2025.12.31 10:42

수산물 유통 온라인 전환, 표준화·디지털화·콜드체인이 관건



박준모 수협중앙회 수산물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표준화는 온라인 거래의 전제
디지털 이력 정보 구축 시급해
콜드체인 없인 신뢰 확보 불가
교육과 제도 정비 등 병행 필요

2024년 기준 우리나라는 전국에서 215개의 산지위판장과 19개의 소비지 수산물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 생산량 309만 톤 중 46.4%인 143만3000톤, 연근해 생산금액 7조8881억 원의 63.4%인 4조9998억 원이 산지위판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으며, 소비지도매시장을 통해 물량 29만4000톤, 금액 1조5722억 원이 거래되고 있다.

위판장·도매시장 운영 현황과 문제점

산지위판장은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물 유통의 출발점이며 수산물 가격이 최초로 결정되는 장소이다. 반면 소비지도매시장은 연근해 수산물이 소비자의 곁으로 오기 전 마지막으로 모이는 대규모 유통 허브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오프라인 거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지위판장과 소비지도매시장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 중에서 산지위판장은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거래방식의 시·공간적 제약을 지닌다. 주로 새벽 시간대에 현장 경매에 의존하므로, 어획 직후 즉시 거래가 어렵거나 특정 시간에 물량이 몰려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둘째, 정보의 비대칭으로 말미암은 가격 결정의 불투명성이 나타나고 있다. 어업인은 소비지 가격, 수요 동향 등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도매인과 중개인 등의 정보 우위로 가격 결정의 불투명성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위생·저온 유통체계(콜드체인)가 미흡하다. 상당수 위판장이 개방형 구조로 돼 있어 외부 오염에 노출되기 쉽고 여름철 고온 시 신선도 유지가 어렵다. 특히 바닥 경매 방식이 이뤄지는 경우엔 위생상의 문제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통 정보화의 지연이다. 전국 산지위판장의 절반가량이 20년 이상 된 시설이며, 수기 기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데이터 관리와 유통 이력 추적 등이 어렵다.

다섯째, 품질 및 규격 표준화가 미흡하다. 수산물의 선별·등급화·포장 기준이 산지위판장마다 달라 정확한 통계 파악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소비지 거래 시 추가 선별·재포장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지도매시장도 산지위판장과 유사한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가격 변동성과 예측 불확실성이 크다. 소비지도매시장은 당일 반입 물량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장기 수급 예측 기능이 미흡한 상황이다.

둘째, 정보 비대칭으로 가격 결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소비지도매시장에서 경매·상장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공유되지 않아 어업인과 소비자 모두 가격과 원가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수급 조절과 정책 설계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위생·저온 유통체계(콜드체인)가 미흡해 품질 관리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소비지도매시장도 대부분 개방형 구조로 돼 있어 외부 오염에 노출되기 쉽고 반입 후 오랜 시간 대기하는 과정에서 수산물의 신선도 저하 가능성이 크다.

넷째,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이 느리다.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소포장·가공 수산물 수요가 늘고 있으나, 소비지도매시장은 여전히 원물(원래 상태의 생선) 위주의 대량 거래에 치중하고 있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홈쇼핑 등 직거래 채널이 확산하면서 도매시장의 가격경쟁력과 상품 규격 대응력이 떨어지고, 출하 물량과 외부 판매 비율이 감소해 소비지 집적 및 가격 조절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지위판장과 소비지도매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산지위판장과 소비지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통해 수산물의 위생안전을 제고하고 저온 유통체계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소비지도매시장은 기존의 경매제 이외에 정가수의매매의 확대를 통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수산물 가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산지위판장과 소비지도매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가격 결정의 신뢰성 문제와 시장 기능의 확대는 여전히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수산물 유통 개선방안



◇수산물 유통의 온라인 전환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규격과 디지털 이력 관리, 안정적인 콜드체인 구축, 교육과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2025년 11월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누리는 신뢰 기반의 유통체계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유통비용률 10% 절감과 주요 수산물 가격 변동성 25% 완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4대 추진 방향과 8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이 중에서 2가지의 내용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품목 대폭 확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온라인 위판으로 산지-소비지 직거래 활성화' 등 산지위판장과 소비지도매시장의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품목 대폭 확대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수산물 품목을 현재 60개에서 134개로 2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요건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판매자 거래 규모가 연간 20억 원 이상으로 제한됐으며, 산지 중도매인은 구매자로만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선안에는 판매자 거래 규모 요건을 삭제했으며, 산지 중도매인도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수협공판장의 여신 시스템을 2028년까지 9개소를 구축해 거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소비자가 온라인에서도 품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등급 판별기술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온라인 위판으로 산지-소비지 직거래 활성화'의 주요 내용은 어업인들이 조업 후 귀항하면서 선상에서 모바일 기기로 위판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위판(전자경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등어, 갈치 등 대중성 어종을 대상으로 유통단계별 영상을 수집해 자동으로 기록하고, 수집된 정보를 빅데이터화해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거래를 위한 선결 과제

산지위판장과 소비지도매시장에서 온라인 거래가 이뤄지면 그동안 오프라인 중심의 거래에서 벗어나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채널을 동시에 활용하는 수산물 거래방식의 전환과 확장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산지위판장과 소비지도매시장에서 온라인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한다.

첫째, 수산물 표준화와 규격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온라인 거래는 상품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크기, 무게, 선도, 지방 함량 등을 데이터화해 객관적인 등급 규격 설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규격화된 포장재를 사용해 물류 효율을 높이고, 정량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수산물의 디지털 유통 정보 시스템과 이력추적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온라인 거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자료가 정확하고 빠르게 공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기 전표 대신 전자경매와 디지털 거래 기록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수급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생산지, 어획 시기, 가공 경로 등을 QR코드 등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이력 관리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콜드체인 및 물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수산물은 부패가 빠르기에 온라인 거래의 속도에 맞춘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이다. 산지위판장이 온도 조절이 가능한 밀폐형 구조(HACCP 기준)로 전환되어야 하며, 산지에서 소비지도매시장, 최종 소비자까지 전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는 콜드체인이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온라인 거래 교육과 전문 검수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기존의 오프라인 중도매인과 출하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법, 이미지·영상 기반의 상품 전시 기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온라인 거래 상품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보증해줄 수 있는 전문 검수원을 배치해 구매자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다섯째,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분쟁 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물유통법)' 등에 온라인 거래의 법적 지위와 거래방식, 거래 절차,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품 파손, 선도 저하, 반품 등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보상체계와 조정 기구 등 분쟁 해결 시스템이 필요하다.

수산물 유통의 혁신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의 한계를 넘어 온라인 거래 체계로의 성공적인 전환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와 ICT 기반 위판체계 구축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표준화, 디지털화, 그리고 철저한 콜드체인 구축이라는 선결과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정책은 단순한 거래방식의 전환을 넘어 수산물 유통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다.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현대적이고 투명한 수산물 유통 생태계가 완성될 것이다.

